

공존과 공멸의 기로에 선 출판계, 활로 찾기 나서

‘한국 출판의 위기 극복 방안’ 주제로 제23회 출판포럼 열려



제23회 출판포럼에서는 도서정가제, 사재기 문제 등 각계의 입장과 방안이 발표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가 공동주최한 제23회 출판포럼이 지난 7월 20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 출판의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이 포럼은 출판사, 온·오프라인 서점, 출판영업인, 출판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출판의 위기상황을 헤쳐갈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이 포럼은 한국출판연구소 윤청광 이사장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도서정가제와 인터넷서점, 공존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출판평론가 한혜경씨(이체 대표)는 도서정가제 공방의 경과와 추이,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한씨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은 서점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공생만이 살 길이라며 관련업계의 공조를 촉구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사재기 베스트셀러, 필요악인가 절대악인가?’로 주제발표했다. 한소장은 최근 출판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IT혁명으로 인한 전반적인

출판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꼽고, 베스트셀러 편중주의가 사재기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사재기 문제는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출판계와 독자, 사재기 현상을 알면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을 무책임하게 보도한 일부 언론에도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언

을 정리한 것이다.

이창연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 “인터넷서점의 과당할인경쟁은 오히려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한다. 앞으로 서련에서는 불건전한 도서공급 행태를 주시하고, 부당거래 업체는 도서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펴나갈 것이다.”

조유식 | 알라딘 대표 | “그동안 정가제 논란은 도서정가제가 강제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출판유통업계 종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연스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먼저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김인호 | 바다출판사 대표 | “도서정가제 논란은 출판계가 공존과 공멸의 기로에 서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인을 30~40%에 이르는 인터넷서점의 가격경쟁은 출판사의 출고를 압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책값 상승을 유도한다. 사재기 문제는 무엇보다 출판계의 자성이 중요하다. 현행 베스트셀러 순위집계 방식도 사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므로 개선

돼야 한다.”

손재원 | 영풍문고 부사장 | “그동안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의만 있었지,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었다. 합의에는 당연히 벌칙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말이다. 사재기는 국민들의 독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출판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손달진 | 출판영업인회의 회장 | “과당 가격경쟁은 서점뿐 아니라 출판사에도 영향을 끼친다. 서점측이 할인판매에 따른 이익폭 축소를 결국 어떤 식으로든 출판사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재기 문제에 대한 출판계 모두의 양식을 되찾는 일이 필요하다.”

정종진 |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 “사재기문제 해결은 출판사들의 자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베스트셀러 순위집계도 현재는 출협, 서련이 공동 집계하고 있지만 앞으로 표집대상을 늘려야 한다. 무조건 정가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지리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서점들도 더 이상 할인이 무기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도서정가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선 범출판계를 망라한 합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정가제를 단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부길만 | 동원대학 출판미디어과 교수 | “도서정가제 논란은 법제정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도서관장서 구입비는 전체 발행도서액의 4~5%에 불과한데 최소한 이를 5배 이상 늘려야 한다.”

사회자인 한국출판연구소 윤청광 이사장은 “워낙 사안이 민감해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오늘 행사가 도서정가제, 사재기 문제 등에 따른 출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각계의 입장과 방안을 들어본 만큼 출판계가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옥순기자